

컨슈머워치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2019. 2. 21 (목) 15: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프로그램
- 개회사 : **이병태** 컨슈머워치 대표, 카이스트 교수
좌 장 : **손정식** 컨슈머워치 고문, 한양대 명예교수
발 제 :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 [탈원전과 에너지가격]
김정호 김정호경제TV 대표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경제의 영향]
토 론 :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정희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전동욱 변호사

- 주 최 컨슈머워치,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 국회의원 추경호

개회사	이병태 컨슈머워치 대표, 카이스트 교수	
환영사	추경호 국회의원	6
축 사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8
	김선동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10
사 회	손정식 손정식 컨슈머워치 고문, 한양대 명예교수	
발 제	① 탈원전과 에너지가격	15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	
	②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경제의 영향	35
	김정호 김정은경제TV 대표	
토 론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45
	정희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53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	63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73
	전동욱 변호사	85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컨슈머워치, 자유한국당 정책위, 여의도연구원 그리고 저희 의원실 공동으로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컨슈머워치 손정식 고문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양준모 교수님, 김정호 대표님, 그리고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허희영 교수님, 정희상 교수님, 이종인 실장님, 박주희 실장님, 그리고 전통육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 경제위기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은 일제히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고, 경기동행·선행지수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7개월째 동반 하락했습니다. 투자, 소비, 생산 지표도 모두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목표로 삼았던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성적도 참담합니다. 일자리대통령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전체 실업자 수와 장기 실업자 수 모두 19년 만에 최악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무려 54조원의 일자리 재정을 쏟아 부은 결과 치고는 참으로 초라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중상층 이상의 소득은 늘면서 소득분배도 악화됐습니다.

이쯤 되면 경제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정상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반드시 가야할 길이란 점을 재확인했고, 지난 14일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불러놓고 인상은 계속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경제 마이웨이’ 선언을 되풀이 한 것입니다.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文정부는 ‘화(火)’만 더 안겨주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현실과 너무 괴리돼 있고 처방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으니 무조건 따라오란 식의 오만과 무책임이 여전합니다.

지금처럼 민간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개입, 그리고 기업 옥죄기가 계속되는 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세금 퍼주기에 의존하는 정부주도 재정만능주의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는 정책은 절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때입니다.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의 담을 헐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정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것이 소비자에게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제대로 진단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 당에서도 소비자 후생, 소비자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국회의원 **추경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입니다.

오늘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컨슈머워치 이병태 대표님, 여의도연구원 김선동 원장님 그리고 추경호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좌장을 맡아주신 컨슈머워치 손정식 고문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3년차를 맞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서민들 잘살게 해주겠다고 시작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민생 서민경제 파탄을 불러왔고, 청년들을 일자리 절벽으로 몰았습다. 그야말로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더 괴롭히는 정권입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에 해당하는 소득5분위 배율은 5.52배(18 3분기 기준)로 11년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지난해 1~3분기까지의 소득분위별 실질처분가능소득을 살펴보면 3분기 연속 1~3분위의 소득은 줄고, 4~5분위의 소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가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최악의 고용참사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2년간 54조원의 일자리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지난 1월 실업자 수는 122만명을 기록하면서 2000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연간으로 따져봐도 2018년 실업률은 3.8%로 01년(4.0%) 이후 17년 만에 최악, 청년체감실업률은 22.8%로 2015년 통계작성 이후 최악, 장기실업자도 15만4천명으로 18년 만에 최악, 연간 취업자 증가 수도 9.7만명에 그치면서 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가 나올 때마다 ‘역대 최악’, ‘역대 최저’라는 수식어가 붙는 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 현실입니다.

주요 경제지표가 이렇게 최악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자화자찬 일색입니다. 그리고 이런 뻔뻔함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경제 마이웨이’를 고수하겠다고 합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준비없는 근로시간 단축 등 이 정부가 해 온 무분별한 정책실험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된 점을 참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하신 전문가, 그리고 컨슈머워치 관계자 여러분의 고견은 저희 정책위에서 잘 논의하여 당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선동입니다.

이번에 컨슈머워치 창립 5주년을 기념하면서, 여의도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그리고 추경호 국회의원 공동으로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병태 컨슈머워치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성장률과 수출, 고용시장과 제조업 등 거의 모든 관련 지표들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월 30만명 목표 달성은 한참 전에 물 건너갔으며 54조원의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수많은 민간일자리, 청년일자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소득격차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 에너지정책은 경제적, 에너지 안보적 고려 없이 정치적 이념에 따른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절규에는 귀를 닫은 채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적 성장으로 포장만 바꾼 채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인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 실험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일자리 감소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구매력 감소로 소비자 삶의 질이 추락하게 됩니다. 정부의 재정지출급증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되며 탈원전정책 강행으로 인해 소비가계의 전기료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시장경제에서의 소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이 무너지면 한국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문제인 정부의 잘못된 국가중심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이 시장과 기업,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더 이상 희생되는 소비자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의도연구원이 컨슈머워치,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추경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이유입니다.

컨슈머워치 창립 5주년을 축하하면서, 세미나의 진행을 맡아주실 손정식 컨슈머워치 고문님, 발제를 맡으신 양준모 연세대 교수님과 김정호 김경호경제TV 대표님, 그리고 토론을 맡으신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님, 정희상 강원대 교수님,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님, 전동욱 변호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경제, 우리 소비자를 위한 해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선동**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

탈원전과 에너지 가격

탈원전과 에너지 가격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

I. 문제제기

에너지 전환은 전환의 방향뿐만 아니라 시기와 규모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이 초래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합리적 경로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한 바가 없다. 갑작스럽게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도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어떠한 권위도 지니지 못했다. 민주적 절차도 생략됐다. 합리적 토론보다 전문성보다 여론이 의사결정의 도구로 사용됐다. 국민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정보가 왜곡돼 있었다. 여론 조사가 에너지 전환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 과연 국민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본 연구는 탈원전 정책이 야기하는 종합적 측면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는 탈원전 정책이 야기하는 직접적인 에너지 가격 측면의 문제이고 둘째는 이러한 에너지 가격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셋째는 환경, 경제, 그리고 에너지 공급 비용의 종합적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 경로에 대한 논의이다.

양준모(2018)은 3E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 경로의 문제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문제를 검토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는 연구결과다. 에너지최적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60여년 이상의 장기간의 계획기간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념적 틀에서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그 손실은 국민의 몫이다.

탈원전의 개념은 원자력발전소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정상적인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원전 발전 비중을 최적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용어의 혼돈이 있다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없다. 탈원전 정책으로 얼마나 국민의 부담이 늘었는지, 그리고 환경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박희천(2018)은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정책을 직접적으로 평가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검토한 이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정책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발전 분야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 목표를 20%로 설정했다. 박희천(2018)은 에너지전환정책의 근거가 된 2030년에 태양광의 에너지 패리티는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더욱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전원의 설비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효율적이었으며 가능하지도 않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II. 탈원전의 의미

1. 원자력의 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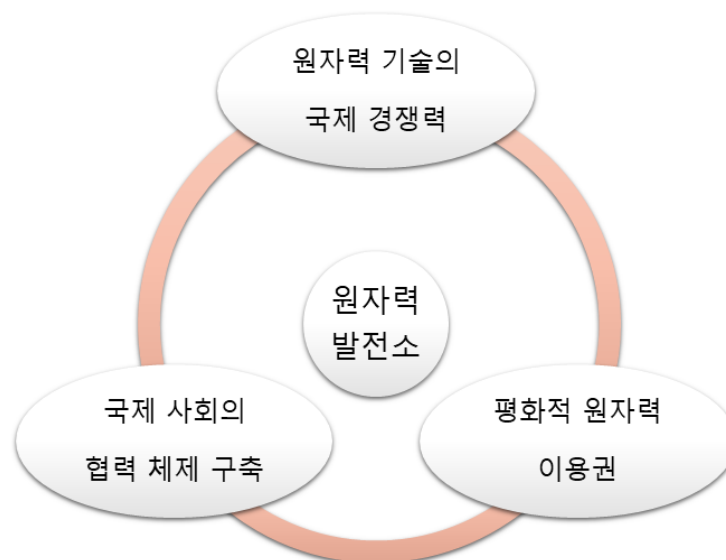
원자력발전은 발전소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은 기본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을 그 동안 꾸준히 축적해 왔다. 이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프랑스, 일본

등과 경쟁하고 있다.

원자력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획득했다. 이 권리는 향후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더 안전한 원전 이용을 위해 매진하고 있었다.

핵무기는 개발하지 않았지만 핵을 사용할 권리를 국제사회로부터 획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안보가 보장되고 있다.

〈그림 1〉 원전의 경제학



2.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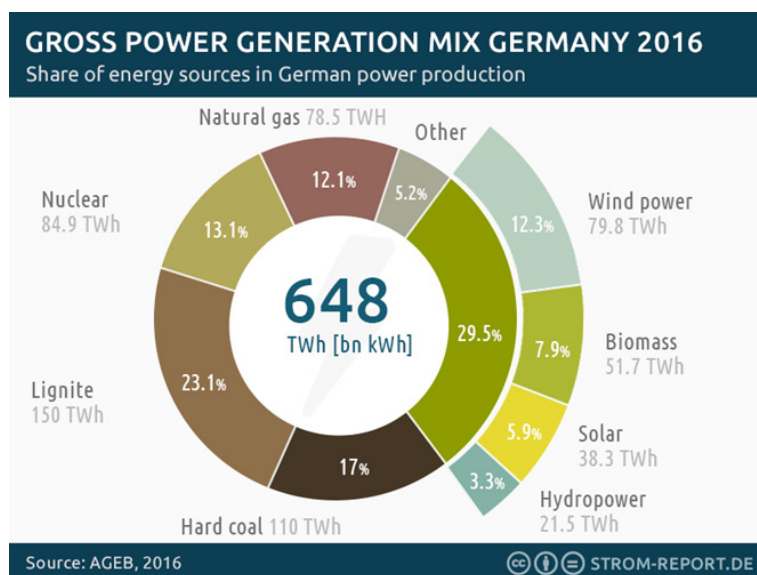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탈원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탈원전은 합리적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원전을 이용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탈원전을 원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실질적으로 원전 산업을 쇠락시키면서도 탈원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탈원전은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 검토 없이 원자력 이용을 줄이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예컨대 지붕에 녹이 있다고 무작정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는 행위는 탈원전적 사고에 기인한다. 합리적으로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과장하여 원전 정비를 빌미로 원전 가동을 멈추는 행위도 탈원전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균등화 원가 등에서 최적 에너지 전환 경로에서 벗어나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행위도 탈원전 행위이다. 원전 비중을 합리적 근거 없이 줄이는 행위를 탈원전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최적 경로는 계산됐는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이 전체 20%가 가능한 이야기인가. 비용 평가가 없는 계획이 가능한가.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환경적 평가 없이 에너지 전환 계획이 가능한가.

〈그림 2〉 독일의 전원별 발전 비중



<https://1-stromvergleich.com/strom-report/renewable-energy/#germany-power-generation-mix-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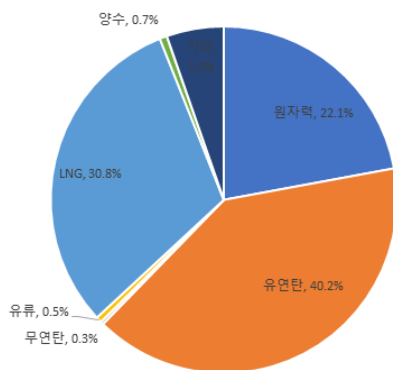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많은 논점들은 무시되고 원전 폐지를 시도했다. 정치적 이해 득실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 들여 왜곡된 시각이 표출된다. 일본의 원전 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면서 원전과 관련된 영화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모두 과학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원전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전력 수급에서의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독일의 경험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할 수도 없고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원을 대체하기도 힘들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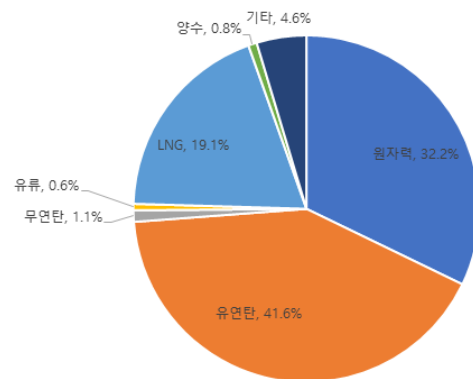
태양광은 전력 저장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용량을 늘려도 전력발전 비중이 15% 이상 올리기 어렵다. 결국 최대전력수요의 100% 용량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해도 실제 용량은 15%가량에 머물 수 있다. 결국 20% 비중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증가시키는 것은 전력 공급의 많은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 전력을 수출할 수 없고 저장할 수 없다면 태양광 공급 계획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될 수 없다. 저장장치 및 백업 설비 등의 비용도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 없이 에너지 전환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그림 3〉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결과

2018년 4월



2017년 4월



출처: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문재인정부의 발전원별 발전 비중을 살펴보자. 예컨대 2017년 4월과 2018년 4월을 비교해 보면 원전의 비중이 얼마나 축소됐는지 알 수 있다. 2017년 4월간 원전의 발전비중은 32.2%였다. 2018년 4월간 원전의 발전비중은 22.1%로 감소했다. 유연탄은 41.6%에서 40.2%로 변화가 거의 없다. 반면 LNG는 19.1%에서 30.8%로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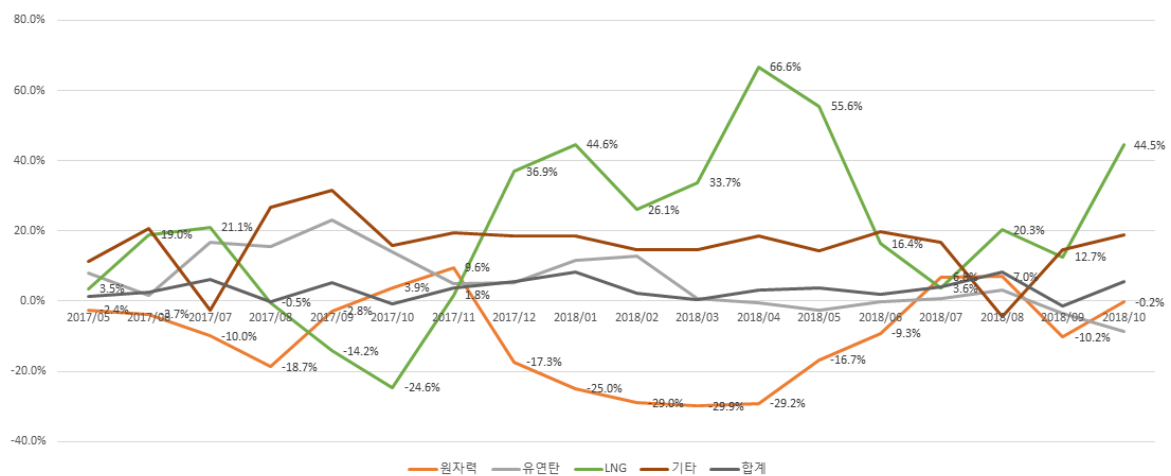
가스발전의 급증은 원전 대체 발전원이 가스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석탄은 기저발전으로 운용되는 관계로 확대가능성이 없으나, 탈원전으로 가스가 발전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 탈원전의 기회비용은 가스발전의 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

탈원전이 4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발전 상황을 보면 원전은 현저하게 발전량이 줄었다. 반면 가스발전은 현저하게 증가했다. 다른 발전원들은 일정한 증가율을 유지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제일 우선적으로 발전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증가는 20%대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급증하고 있으나 급증의 속도가 매월 일정하게 유지된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증가는 전체 발전량의 비중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서는 향후에도 계속 높은 증가율로 증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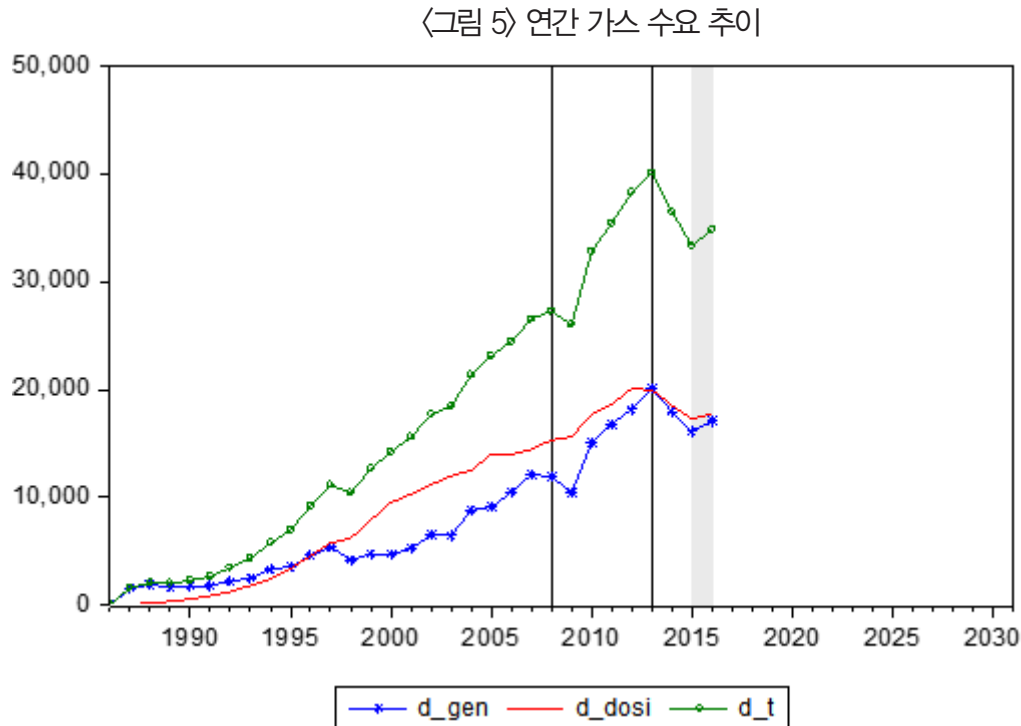
재생에너지의 경우 계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가속도가 제어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과 각종 토지 관련 행정 업무 등으로 단기간에 급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림 4〉 2017년 5월~2018년 10월 발전원별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출처: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가스발전소는 이미 건립되어 있었고 그 활용도는 떨어졌다. 가스발전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전력 공급 시 최후의 발전 순위를 갖는다. 전력수요가 기저발전소의 전력 공급 능력을 넘어야 가스 발전소가 가동할 수 있다. 그나마 가동률도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가스발전소는 탈원전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로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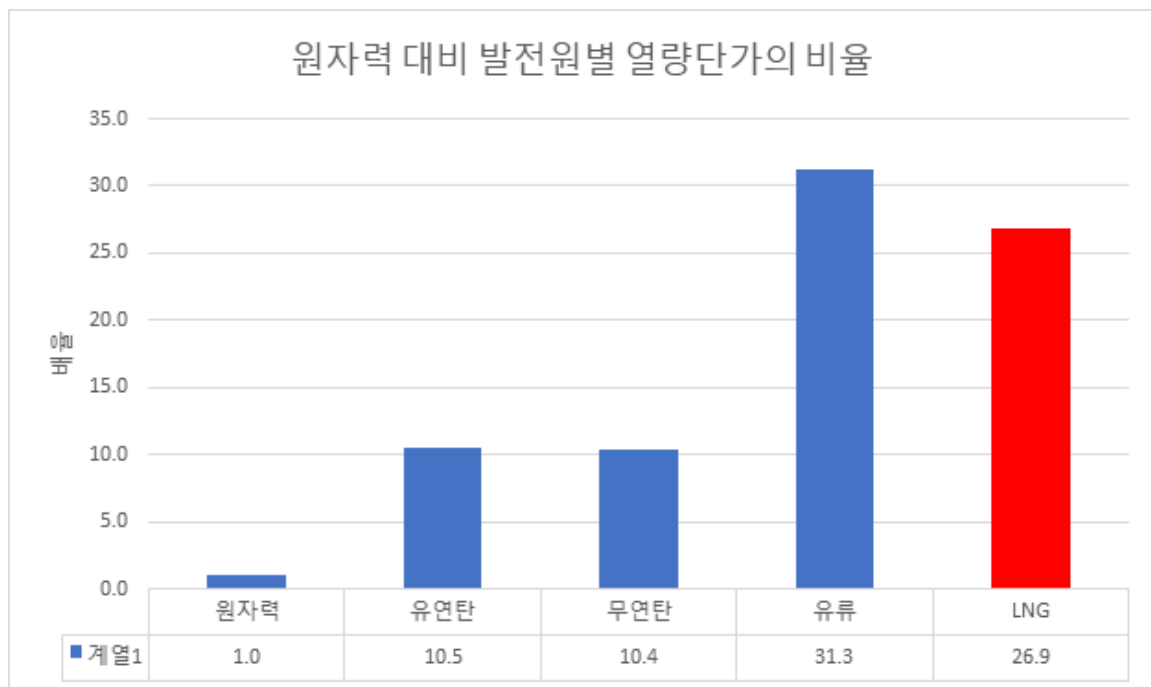
출처: 양준모 외 (2017)

〈그림 5〉에서는 연간 가스 수요 추이를 보여준다. 가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이후 급감했다. 도시가스의 수요보다도 전력용 가스 수요의 급감이 심하게 나타났다. 아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LNG발전소의 이용률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40%를 밑돌았고, 2013년 67.1%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하락세를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어렵던 가스발전소의 경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나아지기 시작했다.

탈원전으로 결과적으로 발전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 원전에 비해 가스발전의 열량단가는 매우 높다. 〈그림 6〉은 2019년 2월 현재 Gcal 당 원전은 2364.8원이다. 이에 비해 가스는 26.9배로 매우 비싸다.

원전의 건설비용이 가스발전소의 건설비용보다 높지만 이미 가동 가능한 원전을 놓고 가스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면 경제적으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림 6〉 원자력 대비 발전원별 열량단가 비율(2019년 2월 기준)



III. 탈원전과 에너지 비용의 상승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전력공급 수단이 가스발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존의 공급 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운전량이 변동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비용을 상승시켰는지는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다.

다음의 표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설비는 이미 건설됐기 때문에 설비 비용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설비를 이용하여 발전원별 가동률을 어떻게 변화시켜 발전시켰는가가 탈원전의 비용을 결정한다. 자료가 공개된 시간인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집권 초기는 탈원전이 강하게 진행되는 기간이었다.

비용계산은 정산단가를 이용하여 계산했다. 정산단가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비용의 직접 계산이 어렵다. 다만 탈원전 비용을 대략적으로 추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정산단가에서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 배출권 거래와 REC 정산액은 배재했다. 오히려 전통적인 발전이 증가했기 때문에 비용 차이는 더 클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지불한 정산단가에서 2015년 5월~2016년 10월까지의 발전원별 비중으로 운영되었다면 지불할 정산단가를 빼서 그 차이를 비용으로 산출했다.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발전원별 비중을 탈원전 비중이 아니라 1년전의 발전 비중으로 운영했을 때, 얼마나 비용을 절약했는가이기도 하다.

〈표 1〉 문재인 정부 탈원전의 비용 계산

비용계산 방법 • 평가기간: 2017년 5월~2018년 10월 • 평가방법: • 2015년 5월~2016년 10월의 발전원별 비중 유지 시 발전 비용과 2017년 5월~2018년 10월 실제 발전 비용 비용. •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실제 비용 적용
비용계산 결과 •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12,821억 원을 추가로 비용으로 지급 • 특히 2017년 12월-2018년 8월의 기간에만 11,712억원을 추가로 지급

계산 결과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 원전을 배제한 전력 공급으로 불필요한 1조 2821억원을 더 지불했다. 특히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의 기간에만 1조 1712억 원을 추가로 지불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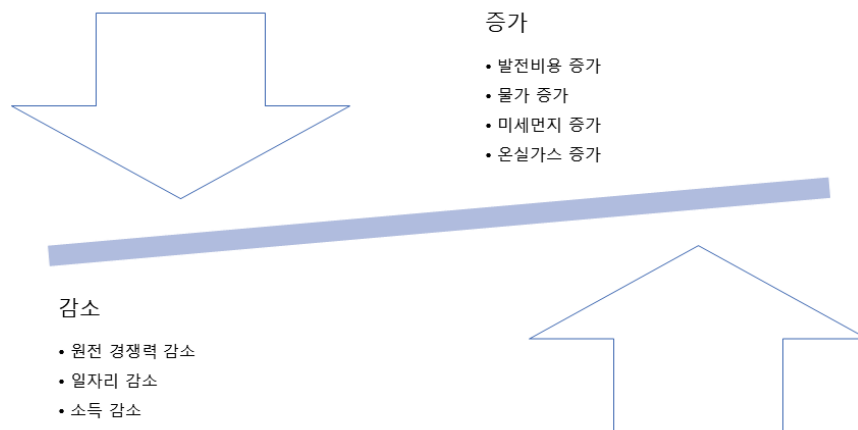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했지만 무엇을 얻었는가. 발전비용이 증가하자 물가 전가를 우려해서 한전이 이를 흡수 했다. 전기료는 누진제 폐지 등으로 하락하고 한전의 정산비용을 급증했다. 한전의 손실로 나타나고 손실로 인해 경영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원전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대신 가스발전을 추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미세먼지도 증가했다. 온실가스도 증가했다. 과연 환경을 얻었는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원전 기술에 대한 국제적 회의감을 야기하여 국제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됐다. 일자리도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소득도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일단 한전이 비용을 흡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파급은 제한됐지만 언젠가는 이를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림 7〉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비용 평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비용 1조 2천 억원!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탈원전 1년만에 막대한 비용 상승을 초래했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원전의 안전을 기화로 지나치게 오랜 기간 정비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과연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장기간의 정비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의 원전 정비는 탈원전의 범위에 속한다.

〈표 2〉 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한 2030년 비용증가

8차 수급계획 상의 전력 비용 상승효과

기준 시나리오 발전비중

연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석유	양수	계
2017	30.30%	45.40%	16.90%	6.20%	0.60%	0.70%	100%
2030	23.90%	40.50%	14.50%	20.00%	0.30%	0.80%	100%

2018년 10월 정산
단가 적용 시



정산 비용만
18% 상승

8차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탈원전의 의지가 분명하다. 현재 원전의 전력 비중을 30.3%에서 23.9%로 줄인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6.2%에서 20%로 증가 시킨다.

이와 같은 탈원전은 정산비용을 급증시킨다. 2018년 10월의 정산단가를 적용할 때, 정산비용만 18%가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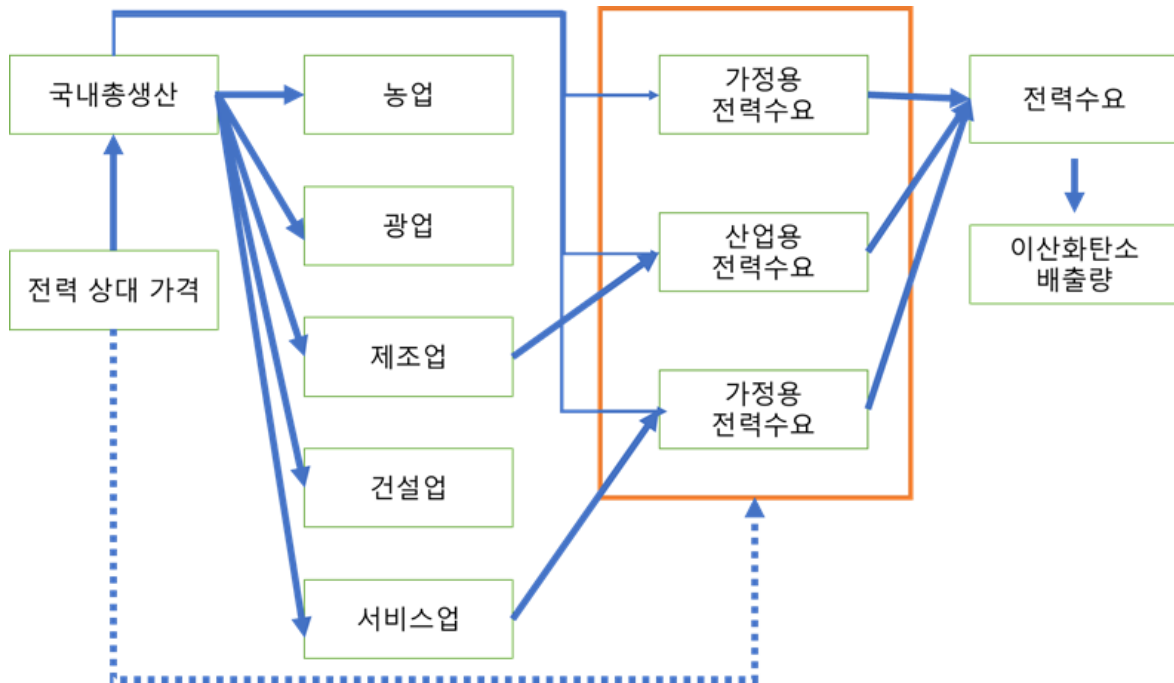
IV. 에너지 비용 상승의 경제적 부작용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단순히 물가만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1차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킨다. 물가만이 아니라 각 산업의 생산에도 영향을 준다. 산업 생산의 감소는 국내총생산의 감소를 야기한다.

〈그림 8〉은 전력부문을 강조한 거시경제모형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전력 가격은 각 산업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이 감소하고 용도별 전력수요도 감소한다. 전력수요의 감소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킨다.

다만 탈원전의 경우는 다르다. 원전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는 없다. 결국 전력수요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는 배출계수의 감소로 인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림 8〉 거시경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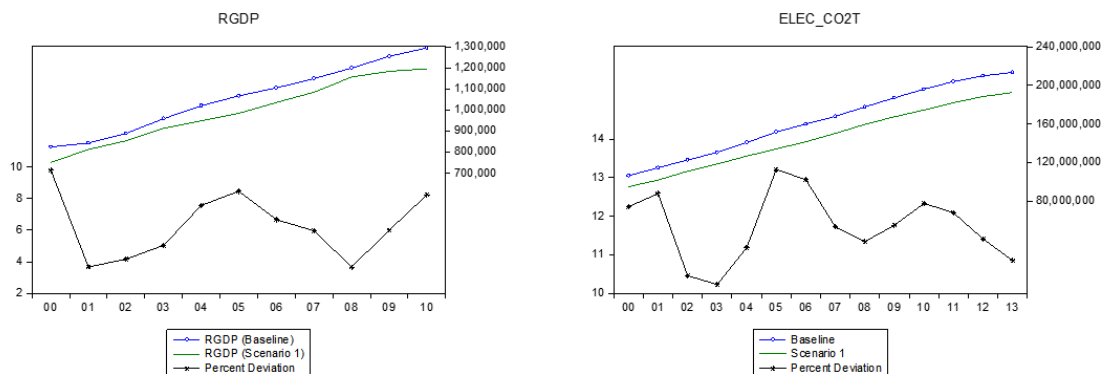


출처: 양준모 (2018)

에너지 전환이 전력비용을 상승시키고 국민경제의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하다. 양준모(2018)은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전력요금이 30% 상승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했다.

5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약 44만명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추정 결과가 과도한 것인지 아닌지의 논란보다는 전력요금 상승이 경제에 얼마나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림 9〉 전력요금 상승의 파급효과



만약 에너지 전환으로 요금이 30%오르면 2017년 기준 51조 원의 손실 발생 (438,447 명의 일자리 상실)

출처: 양준모 (2018)

전력 요금의 상승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우리의 소득을 줄인다는 사실을 에너지 전환에 반영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탈원전의 이슈는 정치적으로 결정됐다.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판단의 근거는 에너지 전환에 관련해 이슈들을 검토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결정했다는 발표가 없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환 시의 전력요금 변화, 그리고 백업시설 비용 및 저장장치 비용 등이 제시돼야 한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비교 검토도 제시돼야 한다. 양준모(2018)은 균등화에너지비용을 이용하여 현재 1 kWh가 필요할 때, 어떤 종류의 발전소를 건립해야 하는가를 계산했다.

기본적으로 60년간 총 에너지 비용을 계산하여 비교 평가한다. 원전은 60년을 사용할 수 있다. 60년을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 쟁점이 발생한다. 첫째는 60년간 비용이 고정된다. 물론 건설비용도 현재 가격에서 변함이 없다. 다만 환경 가치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폐기 비용은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둘째, 원전 대안은 다양하다는 점이다. 태양광은 20년, 석탄 등은 3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태양광은 세 번의 전환 기회가 주어지고 석탄은 두 번의 전환 기회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60년간의 균등화에너지비용은 변화한다. 태양광의 비용은 주장에 따르면 매우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싸고 나중에 떨어진다면 나중에 설치해야 바람직하다. 현재 태양광이 비싸고 다른 발전기가 더 싸서 향후 태양광의 비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때까지 태양광의 현재 고비용이 미래에 향유할 수 있는 비용절감보다 높다면 현재 저렴한 발전원을 선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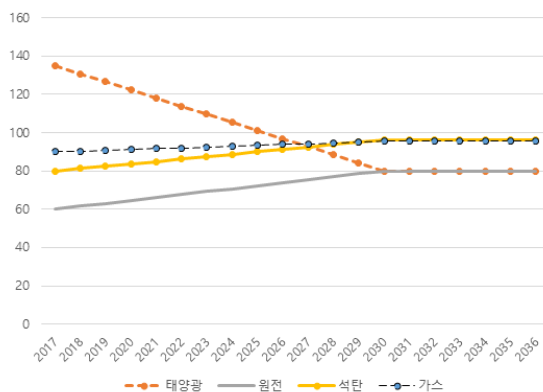
양준모(2018)은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했다. 양준모(2018)에 의하면 어떠한 대안으로도 원전으로 60년 유지하는 것이 환경비용까지 포함한 균등화에너지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양준모(2018)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한국산업조직학회가 발표한 균등화에너지비용을 사용하고 시나리오별로 확대 했다. 그러나 현재 조사된 균등화에너지비용에서는 비용 증가가 경제적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효과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결국 환경 비용은 포함됐으나, 경제적 부작용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의 강점은 더 부각된다. 현재 연료비가 저렴한 발전원이 더 중시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그림 10〉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LCOE의 동향 시나리오 1: 2030년 이후 고정



매년 1kWh 소비 시 발전원별 비용

초기 선택	비용	설명
원전	3,600	60년 설치 운영
태양광	5,900	20년 3번
석탄	5,288	30년 2번
가스	5,563	30년 2번

출처: 양준모 (2018)

V. 결론

탈원전 정책으로 문재인 정권들어 2017년 5월~2018년 10월까지 정산료만 1조 2,821억원을 더 사용했다. 원전 정지해서 향후 아낄 수 있는 연료비가 증가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단순한 계산으로도 전력요금이 20% 이상 상승할 것이다. 태양광을 설치해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백업설비도 필요하다. 백업설비는 기존의 화력발전소이다. 저장장치도 필요하다. 저장장치의 비용도 매우 비싸다. 산지개발 등으로 이산화탄소가 더 증가하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계산도 되지 않았다.

이런 부가적인 계산을 다 빼고도 향후 60년의 에너지 전환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원전이 월등한 선택이다. 월등한 선택을 배제한 탈원전 전력수급계획은 전력비용을 현저히 상승시킬 것이다.

전력요금의 증가는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켜서 소비자들의 고통을 증가시킨다. 소비자물가만을 올리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산업 기반을 흔들고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삶의 질은 떨어진다.

환경적 차원에서 과연 에너지 전환이 얼마나 기여했는가.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가스발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비용만 상승한 에너지 전환 계획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됐으나 논리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탄핵될 수밖에 없다.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 박희천. 2018. “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통한 한국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 가능성 평가,” 「천연가스산업연구」, 천연가스산업연구회, 제7권 1호 2018년 9월, pp. 131~168
- 양준모. 2018. “3E 관점에서의 최적 에너지 전환 경로에 관한 연구: 전력을 중심으로,” 「천연가스산업연구」, 천연가스산업연구회, 제7권 1호 2018년 9월, pp. 169~190
- 양준모 외. 2017. “도시가스 수요예측 모형에 대한 소고,”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6B): pp. 3087~3102.
- 양준모 외. 2018. “전력수요의 빈도별 시계열 특성에 따른 예측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4B): pp. 1991~2003.
- 양준모 외. 2008. “에너지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유가상승 파급효과 추정,” 「에너지경제연구」 제7권 제1호: pp. 1~41.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7. 「2017년 균등화발전비용 공개토론회 자료집」
- Barker, T., and Scricciu, S.S. 2010. “Modeling Low Climate Stabilization with E3MG: Towards a 'New Economics' Approach to Simulating Energy–Environment–Economy System Dynamics,” *The Energy Journal* 31: pp. 137~164
- Knaut, A., Tode, C., Lindenberg, L., Malischek R., Paulus, S., Wagner, J. 2016. “The reference forecast of the German energy transition—An outlook on electricity,” *Markets, Energy Policy* 92: pp. 477~491.
- Köhler, J., Barker, T., Anderson, D., and Pan, H. 2006. “Combining Energy Technology Dynamics and Macroeconometrics: The E3MG Model,” *The Energy Journal* 27: pp. 113~13

- Seba, T. 2014. Clean Disruption of Energy and Transportation: How Silicon Valley Will Make Oil, Nuclear, Natural Gas, Coal, Electric Utilities and Conventional Cars Obsolete by 2030. Clean Planet Venture.
- van der Ploeg, F., and Withagen C. 2014. "GROWTH, RENEWABLES, AND THE OPTIMAL CARBON TAX."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55(1): pp. 283–311.

김정호 김정호경제TV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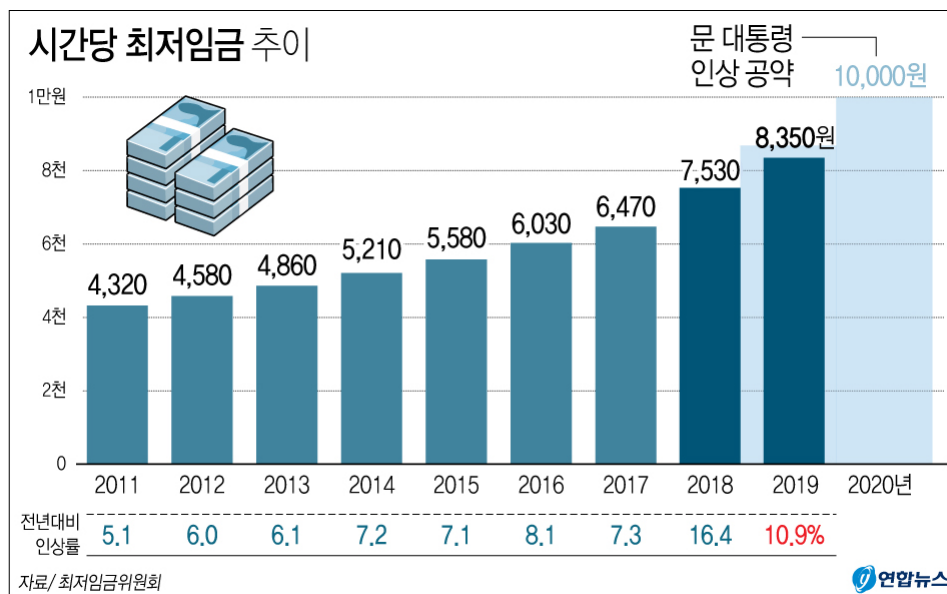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경제의 영향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 경제의 영향

김정호 김정호경제TV 대표

1. 들어가는 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다. 그것을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왔다. 다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까지 매년 6~8% 수준에서 인상되어 오던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반영된 2018년부터 16.4%, 10.9%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윤, 김토일 기자 / 20180912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kr/LeYN1

자료: 연합뉴스 사이트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노동자. 더 나아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의도.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호적이지 않다. 실업률은 늘었고 가계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는 뉴스들이 들려온다. 반면 정부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편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최저임금과 가계소득 소득은 늘었는가

이 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2018년 가계소득이 증가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4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소득 상황이다. 3/4 분기의 소득금액과 더불어 전년 동기와 비교한 증감률도 보여준다. 이 수치들은 소득 계층을 5개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1분위가 가장 최저소득계층이고 5분위가 최상위 소득계층이다. 2018년 4/4분기를 포함한 1년 전체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3/4 분기만의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이 4.6% 증가했다. 그런데 소득계층별로는 차이가 많다. 최고 소득층인 5분위는 8.8%, 4분위는 5.8% 3분위는 2.1%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인 1분위, 2분위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했다. 2분위는 -0.5% 로서 약간 감소했고 최저소득층인 1분위는 -7.0% 로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하위소득층일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2018년처럼 최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큰 폭인데다가 상위소득층과의 격차가 커진 적은 없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근로소득에서 그같은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최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근로소득 증가률이 -22.6%로서 거의 1/4 에 가까운 감소를 보이고 있다. 2분위도 -3.2% 약간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계층은 11.3% 증가 3분위, 4분위는 2.1, 2.6%로서 약간의 증가를 보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최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다.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

구 분	2018. 3/4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4,747.9	4.6	1,317.6	-7.0	2,842.8	-0.5	4,147.5	2.1	5,691.1	5.8	9,735.7	8.8
경상소득	4,704.9	5.7	1,312.7	-5.1	2,832.9	0.6	4,134.6	2.7	5,674.9	7.3	9,564.7	9.6
근로소득	3,206.1	4.5	478.9	-22.6	1,614.0	-3.2	2,665.5	2.1	3,965.6	2.6	7,302.3	11.3
사업소득	925.6	1.1	215.9	-13.4	599.4	-1.5	870.6	-11.9	1,178.6	18.8	1,762.9	1.5
재산소득	20.6	9.3	13.2	22.1	14.8	-23.6	24.6	79.6	20.2	46.8	30.0	-17.4
이전소득	552.7	22.8	604.7	19.9	604.8	16.2	573.9	38.8	510.6	21.5	469.7	19.7
비경상소득	43.0	-49.6	4.9	-85.4	9.8	-76.1	12.9	-66.7	16.2	-82.1	170.9	-23.1
비소비지출	1,065.0	23.3	307.4	4.8	585.7	15.8	864.6	16.8	1,237.7	17.4	2,328.5	35.3
처분가능소득	3,682.9	0.3	1,010.2	-10.1	2,257.1	-4.0	3,282.9	-1.2	4,453.4	2.9	7,407.2	2.5

자료: 2018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18.11.22

정리해보면 이렇다. 2018년 3/4분기를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전체 소득은 약간 상승했다. 그런데 그 상승분은 고소득층에서 대부분 일어났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의 감소폭이 컸다. 특히 근로소득의 감소폭이 컸다. 이 결과가 최저임금 때문에만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이 결과는 충격적이다. 저임금소득자,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여줌으로써 이들의 소득을 높여주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현상은 오히려 그 반대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감소의 폭이 큰데다가 그 감소는 대부분 근로소득의 감소에서 비롯됐다. 왜 이 처럼 의도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했을까. 타인을 도움에 있어 자기 돈이 아니라 제3자의 기부를 강제해서 그 뜻을 이루려하기 때문이다.

3. 최저임금은 왜 저소득층의 소득을 줄이는가

최저임금은 왜 저소득층의 소득을 줄이는가. 사용자들이 고용을 줄이기 때문이다. 또는 실업자를 늘리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다.

사용자 또는 고용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지급하는 임금에 맞는 사람을 쓰게 된다. 경제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임금은 생산성에 비례하기 마련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이 금지되면 그 임금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고용하지 않게 된다. 최저임금보다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는 일자리가 더 늘게 되고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가장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들은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앞서 살펴본 저소득층인 1분위, 2분위 가구의 소득감소 특히 근로소득 감소는 바로 이같은 효과에서 비롯될 것일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과 실업률 간의 이같은 관계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유럽의 경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나라와 시행하지 않는 나라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효과가 분명히 드러난다.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나라의 경우 총실업률은 12.6%, 청년실업률은 29.5%이다. 반면 독일 핀란드 스위스 등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총실업률이 6.6%, 청년실업률이 15.8%이다.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나라들의 실업률이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의 거의 두배에 가깝게 높은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생산성 낮은 노동자들의 실업률을 높여서 저소득층에게 피해를 입히는 제도다.

최저임금 시행 유럽국가				최저임금 없는 유럽국가			
국가	최저임금	청년실업률	총실업률	국가	최저임금	청년실업률	총실업률
Belgium	\$12.10	23.2%	8.5%	Austria	\$0.00	10.3%	5.6%
France	\$12.75	23.2%	10.3%	Denmark	\$0.00	12.6%	6.6%
Greece	\$5.23	52.4%	26.5%	Germany	\$0.00 (in 2014)	7.8%	5.0%
Ireland	\$11.50	26.9%	11.3%	Finland	\$0.00	19.3%	8.7%
Lux	\$14.75	22.6%	5.9%	Iceland	\$0.00	10.0%	4.9%
Netherlands	\$11.54	12.7%	6.8%	Italy	\$0.00	42.7%	12.7%
Portugal	\$4.51	34.8%	13.9%	Norway	\$0.00	7.8%	3.5%
Spain	\$5.79	53.2%	24.4%	Sweden	\$0.00	22.9%	8.0%
UK	\$10.70	16.3%	6.1%	Switzerland	\$0.00	8.6%	4.5%
AVERAGE	\$9.87	29.5%	12.6%	AVERAGE	\$0.00	15.8%	6.6%

Source: OECD

2014년 기준. <http://www.aei.org/publication/more-troubling-signs-of-minimum-wage-damage-on-the-west-coast-part-ii/>

노동자들의 실업 증가뿐 아니라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또는 그들의 폐업이 늘어난 것도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빈곤층을 돕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다. 그들을 돕고 싶다면 사용자들에게 도우라고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 돕는 것이 가장 좋다. 기초생계수급 대상자를 늘릴 수도 있고 그 수급액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나 교육 지원금을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저소득층을 도우라고 규제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4. 그런데도 정부는 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90% 성공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홍장표 수석은 노동시장 내의 임금불평등이 완화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수요 사이드의 중요 축이 가계소득을 늘리는 거예요. 절반의 성공은 했다고 생각해요. 근로 가구의 (평균) 소득이 늘었잖아요.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뚜렷한 효과를 확인한 거죠.”¹⁾

문재인 대통령이나 홍장표 수석의 답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저임금 및 실업 상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미 앞서 살펴본 가구소득 데이터다. 그런데 홍장표 수석이 좋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업자를 제외한 통계다. 실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면 당연히 평균소득은 상승하고 불평등은 감소한다. 최저임금 아래의 임금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자가 된 그 사람들의 소득 즉 0(제로)을 제외하는가. 그것 까지 포함하면 평균 소득은 감소하고 불평등도는 높아진다.

1) 홍장표 “최저임금 탓 일자리 대폭 감소 주장은 소설”, 한겨레신문 2019년 2월 15일자 인터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2275.html?_fr=mt2#csidx6934492a93af6d68751dd394a58d220

5. 소득주도성장-분수효과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책의 하나다.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소득 주도성장은 분수효과를 가져다 준다. 분수효과는 낙수효과에 맞설 생각으로 제안된 이론인데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주면 소비가 늘어나서 생산이 늘어나고 그것이 경제 전체를 활성화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분수효과는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것임을 우리나라의 현실이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다. 사용자들이 저생산성 노동자들의 고용을 줄이기 때문이다. 중간 이상 노동자들의 소득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국내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해외 소비의 증가 추세 때문이다.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 국내에서는 돈을 아끼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분수효과의 가능성도 작아진다.

그런데도 왜 대중은 최저임금제를 지지하나? 착시현상 때문이다. 착하게 생긴 사람은 정치도 착하게 할 것 같다고 생각하며 표를 주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저임금 노동자를 도와준다는 의도는 분명 좋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도 같아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지지한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착해 보이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듯이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 시장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의도와는 달리 2차, 3차 효과가 작용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저임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안겨 준다. 정책은 겉으로 드러나는 인상만으로 채택해서는 안된다.

6. 결론. 저소득층 보호라는 선의가 그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서양 격언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결과적으로 정반대의 효과를 초래할 때가 많음을 경고하는 말이다. 남을 도울 때 자기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돕기를 강요할 경우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저임금 정책에서 정확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의도는 저소득층, 저임금 근로자를 돕기 위함이지만 오히려 저임 노동자들의 상당수에게 일자리 자체를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생산성 낮은 사업자-사용자들로 하여금 노동자의 고용 자체를 기피하게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저소득층의 가계소득도 낮아졌다. 득을 본 사람이 있다면 원래부터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온 노동자들, 비교적 처지가 괜찮은 노동자들. 굳이 돕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줬다.

최저임금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 선진국 중에도 최저임금을 두지 않거나 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하는 나라들이 많다. 불가피하게 최저임금을 유지할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률이 저임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 속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과격할수록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최저임금처럼 사용자를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지원으로 한정해야 한다. 기초생계수급제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 토론문

토론문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1. 탈원전과 에너지 가격

- 탈원전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는 에너지가격의 인상, 지구온난화 촉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증가, 대(大)정전(blackout)의 위험성, 에너지종사자의 인명피해 증가, 자연훼손에 의한 환경 파괴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등 일부국가는 원자력발전소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이 가장 경제적인 전원이다. 탈원전정책이 지속된다면, 생산비용의 증는 에너지 가격의 심각한 인상을 가져올 것이다. 탈원전이 에너지가격에 미치게 될 경제적 효과를 폭넓게 분석해 주신 양준모 교수의 발제에 공감하며, 대체에너지의 생산비용과 경제성에 대해 덧붙이고자 한다.
- 전원에 대한 경제성 비교는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파는 가격(정산단가)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수요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정산단가를 사용하지 않고, 전세계의 모든 기관들은 경제성 비교시 균등화발전비용(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의 개념을 사용한다. LCOE는 전원별로 상이한 경제적 조건(예, 운전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발전비용 비교의 혼란을 피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발전원의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해 성립된 발전비용 계산방법. 모든 비용을 한 시점으로 모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원/kWh (\$/MWh)로 표현되어 발전단가에 해당된다. 노동석 박사(전원의 경제성과 전원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10)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균등화발전비용은 아래와 같이 풍력, 태양광 순으로 비용이 생산비용이 높게 추정된다.

〈표〉 우리나라의 전원별 생산비용(LCOE 기준)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계
가스	9.2	5.4	89.9	104
원자력	23.3	26.4	4.7	54
풍력	-	-	-	150(283)
태양광	-	-	-	142(155)

주 : 육상(해상) 풍력, 지상(육상) 태양광
자료 : 제7차 전력수급계획, 에너지경제연구원(2017. 10)

- 원전사고로 인한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더라도 원자력은 경제적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불확실한 사고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지 않지만, 반영하더라도 원자력은 유연탄과 함께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라는 것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14.01)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비용을 발전원가 4.05원/kWh로 평가한 이후 2016년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비용을 재산정(81조원 → 220조원)하였는데, 사고비용을 원가에 반영하여 전원별로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이 경우에도 원전은 경제적인 전원이다.

〈표2〉 사고비용의 원가반영시 전원별 경제성 비교

구분	원자력			유연탄	유류	가스 (LNG)
	사고비용	원가	합계			
'14년 2차 에너지기본계획 기준	81조원 → 4.05원/kWh	49.58	53.63	60.13	177.44	147.41
'16년 후쿠시마 사고비용 반영시	220조원 → 11원/kWh		60.58			

자료 : 노동석, 경제성과 전원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10

- 신재생에너지인가? 원자력인가? 답은 간단하다. 원자력 때문에 신재생을 못하거나, 신재생 확대를 위해 탈원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마다 에너지 여건이나 형편에 따라 에너지믹스 정책이 다음의 경우처럼 달라지기 때문이다(노동석, 2017).

- 미국 : 가스 ·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유지, 석탄 축소
- 일본 :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 화력 비중 고르게 축소
- 영국 : 재생에너지, 원자력, 가스발전 확대, 석탄 폐지
- 독일 :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유지, 원자력 폐지

향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수급 확대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WEO 2016)는 2°C 상승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화력은 절반으로 축소되어야 하고, 원자력은 2.4배, 수력 및 재생에너지는 3.7배로 각각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IEO 2016)은 청정전력계획(CPP)에서 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 석탄의 정체를 예상하고 있다.

2. 최저임금 논란과 가계경제의 영향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논란은 뜨겁고 소득하위계층일수록 후유증은 심각하다. 김정호 교수께서 밝히신 최저임금의 가계소득효과에 공감하며, 이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절실한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인가? 에 초점을 두고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 그만큼 기업의 가격경쟁력은 줄어들고 있다. 2018년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시간당 통상임금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2%로 추정된다(국회입법조사처, 2017년 기준). 이는 OECD 27개국(자료수집 가능 표본)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평균은 50.5%인데, 60%를 넘는 국가는 터키, 칠레, 뉴질랜드, 프랑스 4개국(2016년 기준)뿐이었다. 2018년에 또 10.9% 인상

되었으니 2019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8.2%에 달할 것이다(경총, 2018.7).

- 여기에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현재 8개국만 시행) 법으로 정한 주휴수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우리 실제 최저임금 수준은 훨씬 높다. 2019년의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주15시간 이상)을 포함한 시급은 10,020원에 달한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역시 OECD 22개국 중(자료 수집가능 표본) 네 번째로 높다(2018년 7,530원 기준).

〈표3〉 OECD 주요국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상대격차

순위	국가명	상대격차	순위	국가명	상대격차	순위	국가명	상대격차
1	프랑스	123.5	11	벨기에	84.9	21	미국	50.5
2	뉴질랜드	122.1	12	그리스	83.9	22	멕시코	25.8
3	호주	103.8	13	일본	81.5			
4	대한민국	100.0	14	헝가리	81.1			
5	캐나다	99.5	15	이스라엘	79.2			
6	독일	97.4	16	네덜란드	78.4			
7	영국	95.8	17	포르투갈	67.6			
8	폴란드	91.5	18	칠레	65.6			
9	터키	87.1	19	체코	63.0			
10	아일랜드	85.7	20	스페인	61.8			

주 : 1.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격차는 ① 우리나라 최저임금액 대비 각국별 최저임금액의 비율(A) 산출, ② 우리나라 1인당 GNI 대비 각국별 1인당 GNI 비율을 산출(B) 후 ③ 상대격차(A/B)를 산출하여 한국(100)을 기준으로 상대적 수준 비교

2. 순위는 1인당 GNI 대비 상대격차가 높은 순으로 부여,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을수록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음을 의미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 경제지표 분석, 2018.

- 최저임금의 영향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는 사실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영향률이 2001년 2.1%(14만 1천 명)에서 2019년 약 25%(500만 5천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비율이라 최저임금의 준수율과도 상관관계가 높다. 여기에다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2019년 최저임금은 이미 10,020원이고, 이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약 40%에 달할 것이다. 전체근로자의 40%가 받는 임금을 ‘시장이 아니라 국가에서 결정한다.’는 의미다. ‘임금수준은 회사의 지불능력 안에서 노사 자율로 결정한다.’라는 노동법의 기본원리에도 어긋난다.

- 즉, 최저임금 영향률이 프랑스(10.6%), 미국(2.7%), 네덜란드(6.6%), 영국(8.2%) 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경제수준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상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표4〉 주요국의 최저임금 영향률 추이

(단위 : %)

구분	한국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2014	14.5	10.8	3.9	5.3	7.3	6.4
2015	14.6	11.1	3.3	5.2	9.0	6.3
2016	18.2	10.5	2.7	8.2	11.0	6.6
2017	17.4	10.6	—	—	11.8	—
2018	23.6	—	—	—	—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2018)

3. 소비자가 만족하는 정책의 지속가능조건은?

- 정부의 탈원전과 최저임금 정책의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가면 그 피해는 더 심각해 질 것이다. 에너지의 생산비용과 소비자편익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고, 노동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던 노동의 가격을 무리해서 끌어 올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 시장을 모두 신뢰하지 않고 가격을 통제하려는 것이 문제다.
- 정책의 지속성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이 결정한다. 소비자가 만족하지 않는 정책은 존립할 수 없다. 정책의 비용보다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즉 국민의 세금이 더 높아야 경제에는 새로운 가

치가 잉여로 만들어 진다. 그리고 국민의 향유하는 정책이 가져다주는 편익이 내가 지불하는 세금보다 더 높다고 느껴야 국민은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세금을 낸다. 기업의 존립이건 국가의 발전이건 모두 해당되는 지속가능한 생존부등식이다.

$$\text{비용(cost)} < \text{가격(price)} < \text{편익(benefit)}$$

- “원전 없애면 공장 돌리는 전기료 오를 텐데, 원가도 인상되어서 사업하기는 더 힘들어 지겠네요.”
“알바 제때 구해 쓰는 게 어디 쉬운가요. 조금이라도 적게 주면 알바몬, 일당백,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알아보고 곧장 옮겨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최저임금정책을 처음 접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이 대뜸 보였던 반응들이다. 에너지이건 노동력이건 생산비와 가격, 편익을 따져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생하는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정책의 입안자들은 현장에서 먼저 소비자의 니즈를 찾아보고 무엇이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판단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끝)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 토론문

토론문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1. 발제에 대한 토론

■ 탈원전

- (경제성) 신재생에너지는 비쌌. 한국의 정산 단가를 보면 원자력에 비해 풍력이나 태양광이 3.5~4.5배 비쌌
- (친환경) 독일처럼 태양광 발전의 부족분을 채우려고 석탄을 때면 결과적으로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음. 독일에서 지난 5년 동안 탈원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200조 원을 투자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 원전이야말로 친환경적. 온실가스가 안 나옴. 미세먼지도 석탄화력발전과 비교하면 안 나오는 수준.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땅이 필요하니 산림도 훼손해야 함
- (안전성) 후쿠시마에서 2만 명 정도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이는 일본 역사상 최대의 지진·쓰나미로 인한 피해. 원자로 사고로 인한 사망은 없었음. 또 후쿠시마 지진은 규모 9.0이었음. 경주, 포항 지

진은 5.4 내지 5.8 정도였음. 9.0과 5.4는 2배 정도 차이가 아니라, 10의 9승과 10의 5.4승의 차이임. 그런데 후쿠시마 지진 때도 원자로는 멀쩡했음.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내진설계가 돼 있으므로, 한국에서 지진으로 원자로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음. 체르노빌은 원자로 설계부터 잘못돼 있던 경우임. 원래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만들려고 개발한 건데, 그걸 상용화로 연장시켰음. 그런데 체르노빌 사고에서조차 인근 주민들이 받은 방사능은 안전한 수준이었음

■ 최저임금제

- 최저임금제가 정부의 의도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당 임금과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각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까지 통제해야 함
- 하지만 이러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퇴출됨으로써 전체 일자리 수는 감소되는데,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정부는 전체 기업의 수도 통제해야 함
- 결국 최저임금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 노동시간, 근로자 수, 그리고 기업의 수까지 생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함
- 이는 생산요소의 사유재산을 부정한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

2.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책(규제)들

□ 규제의 공익설

—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제가 만들어짐

■ 규제의 포획설(사익설)

—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배분의 강제력을 가진 정부를 포획해 규제를 획득

- 소비자와 경쟁자의 희생을 수반

■ 대형유통업체 규제

—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을 보존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통시장 1km 이내에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제8조), 이들에게 월 2회 의무휴업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전 0-10시 영업을 제한하고 있음(제12조의2)

— 최근 OECD 국가에서는 대형마트 진입·영업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있고, 특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는 한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동일한 영업시간 제한을 모든 점포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대형유통체인 여부에 관계없이 매장 크기 기준에 따라 규제를 시행

—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 규제의 효과는 미미하고, 규제 근거도 약함

- 의무휴업 규제로 대형유통업체의 매출감소는 평균적으로 일일 매출의 5.61%이고, 이 중 약 17-

19% 정도만 전통시장으로 유입됨(Choi and Jeong, 2016)

-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으로 줄어든 소비의 대부분은 온라인 구매, 백화점, 하나로마트 등으로 이전됐고, 소비자가 전통시장과 개인슈퍼마켓으로 소비를 이전하는 현상은 일시적일 뿐, 장기적으로 규제효과 없었음(서용구·조춘한, 2017)
-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Chung et al., 2018)

— 서울시 구별 3대 대형마트 점포 수 자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조사·제공하는 주요 생필품의 소비자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대형마트와 생필품 가격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형마트가 많은 지역들의 평균 장바구니 가격이 낮은 경향이 있었음(정희상, 2015)

■ 복합쇼핑몰 규제

- 의무휴업 규제가 복합쇼핑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은 고조 되고 있음
- 복합쇼핑몰의 영업을 규제하면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큼
- 복합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는 매장 중 적지 않은 수의 매장이 개인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서,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 지난 2012년 5월 「약사법」이 개정되어 몇몇 일반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24시간 연중무휴인 점포(사실상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의 품목 수도 제한적임

- 의료 선진국들은 소비자들의 접근성 향상, 가격경쟁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가, 자가치료 확대 등을 위하여 부작용 및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일반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최근 Chung and Kim(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에 비해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가격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대폭 늘리고, 판매점도 확대

■ 원격의료 규제

- 현행 의료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진료만 가능하고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는 금지(『의료법』 제34조)
- 선진국에서는 의료취약지역과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
- 박문수 외(2016)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격으로 질병의 검사·상담만 가능한 상황에서 치료·약처방 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의 규제완화나, 원격의료서비스는 개인병원에서만 제공 가능한 상황에서 종합병원에서도 제공 가능한 상황으로의 규제완화는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단통법

—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의 주요 내용인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제4조)’이 2017년 10월 1일부터 일몰로 폐지됐음

— 그러나 단통법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인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3조)’는 계속 효력을 유지

-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등의 조건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 독점시장에서와는 달리 이통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은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가시킴

- 서비스 품질 경쟁을 고려하면 보조금 차별 지급은 사회후생도 증가시킴(Chung, 2019)
- 단말기 출고가 인하는 단통법 도입 목적 중 하나였는데, 단통법이 기종별 단말기 출고가를 감소시켰다는 증거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음(이경훈 외, 2015)

■ 도서정가제

—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는 발간 기간과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도서를 정가의 10% 이내 가격할인에 간접할인(포인트 적립 등) 5%를 포함해서 최대 15%까지만 할인해 줄 수 있도록 제한(『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 OECD 34개 회원국 중 프랑스, 독일 등 14개국은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20개국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서점들의 이윤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을 가능성이 높음

-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논의될 무렵 도서유통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가던 온라인 서점들은 강화될 가격할인 제한에 반대했던 반면, 중소규모의 오프라인 서점들은 이에 적극 찬성
- 도서정가제가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여 출판사와 서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정거래법」(제29조제2항)에서 저작물에 대해서는 (최저)재판매가격유지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출판사와 서점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어 해결할 문제

■ 우버

- 세계 각국은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인 우버를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혁신적 서비스로 보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수용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에 시작된 우버 서비스 제공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자가용을 이용한 우버 서비스 제공이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심야시간대에 우선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정책

■ 정태적으로 보면 (시장지배력을 지닌) 기업의 이윤과 소비자후생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임

- 한 소비자 단체는 국내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팝콘(L사이즈)의 가격은 5000원으로 원가 613원에 비해 무려 8배 이상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이를 접한 언론매체와 네티즌들은 극장이 팝콘 가격을 부풀려 판매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비난했음

- 한 시민단체는 CGV가 좌석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하자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줄줄이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하여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썼다고 지적했음. 특히 CGV의 좌석별 차등요금제는 멀티플렉스들의 가격 인상 릴레이를 촉발하고, 관객들을 배려하지 않은 채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처사라고 비판

■ 그러나 동태적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이윤과 소비자후생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임

- 즉, 경쟁 → 시장 확대 →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이득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 토론문

토론문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

1. 머리말

양준모 교수님의 “탈원전과 에너지 가격” 원고, 김정호 대표님의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 경제의 영향” 등 발제자 2분의 발표문을 사전에 일독해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으로부터 비롯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문제에 초점을 맞춰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간 소비자경제와 소비자정책분야에 종사하면서 저도 정부의 경제정책과 소비자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시장경제에 미치는 소비자의 힘, 한마디로 소비자주권(consumers' sovereignty)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제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경제입니다. 어떤 경제정책을 펼 때도 정부는 소비자의 시선에 주목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소비자피해 양산을 초래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의 소득주도성장이 따지고 보면 사회적 약자, 저소득빈곤층,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는 발제자분들의 2가지 발제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토론보다는 관련된 문제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금일 세미나 주제에 관련된 제가 수행한 최근의 조사·분석 결과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최저임금과 가계경제



정부의 공식 통계지표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대통령의 주장¹⁾이 가짜뉴스임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즉, 제도의 취지와는 반대로 저소득, 저임금소득자의 소득을 오히려 크게 감소시킨 것입니다. 발제자

께서도 이 문제를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관련된 논의를 추가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좌)은 발제자가 제시했던 지난해 3/4분기에, 1/4분기와 2/4분기를 추가하여 처분가능소득 부분만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저소득층(1~2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3분기 연속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4~5분위)는 증가했습니다. 더군다나, 소득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5분위배율’²⁾ 그림(우)에서 보듯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5.57배)로 치솟았습니다.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연간 소득5분위 배율은 분기수치를 단순 평균한 것임. 2018년은 1~3분기 평균

1) 2018.8.28. 국무회의 발언

2) 최하위 20% 소득 대비 최상위 20% 소득 비율

과거에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이른바 ‘貧益富 富益富’ 현상이 일반적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고소득층 소득 증가, 저소득층 소득 감소’라는 진정한(?) ‘貧益貧 富益富’ 사회를 구현했습니다.³⁾

대통령은 또 “실제로 올해(2018)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자화자찬했는데,⁴⁾ 적어도 이 말이 성립하려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되었거나, 감소되었더라도 적어도 고소득자의 증가폭보다는 낮아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fact는, 최저임금 급속인상 등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많은 부분이 실직 등으로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발제자도 언급하였듯이 소득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잔여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이를 뒷받침한 청와대의 조작 수준의 我田引水식 통계 재가공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상으로 드러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작 전체가구의 41.38%를 점하는 자영업·소상공인·실업자를 통계해석에서조차 배제시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최저임금 과속인상에 대한 소비자인식

저는 최근에 2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들에 대한 국민(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해보았습니다.⁵⁾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정책, 최저임금과 재정확대,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평가뿐 아니라 (이러한 정책들로부터 비롯된) 소비자들의 생활형편, 미래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 국민들이 직면하는 경제생활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3)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20개월 경제성적표 “벼랑 끝 위기의 한국 경제” 여의도연구원(2019.1)

4) 2018.8.28. 국무회의 발언. 대통령은 그 전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구각재정전략회의, 2018.5.31.)라고 발언.

5) 2018.12.6.~7일 양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24명 대상 ARS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및 같은 해 8월 22~23일간 전국의 2,043명 대상 ARS전화 설문조사.

우선 문제인 정부 출범 이후 20개월동안 소비자들이 느끼는 생활형편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사결과, 전체 국민의 46.9% “나빠졌다” 응답, 좋아졌다는 응답은 19.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4개월 전 조사(나빠짐 43.7%, 좋아짐 20.8%)에 비해 부정적 평가가 늘어난 것입니다.

[가계 살림살이 형편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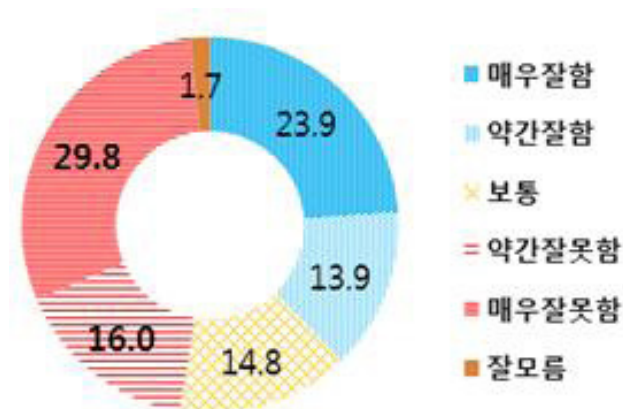


[향후1년 생활형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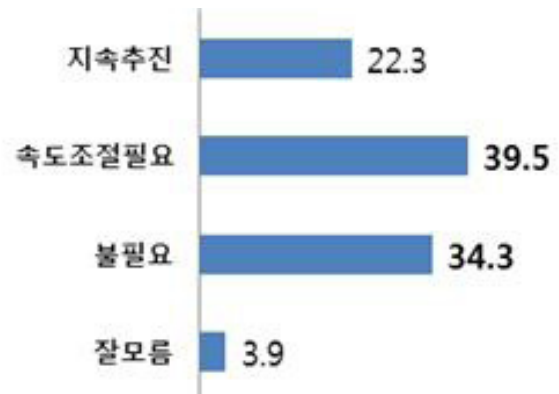


문제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했다”(45.8%)가 “잘했다”(37.8%)보다 높았으며, 8월 조사 대비 부정평가가 4.8%p 증가한 반면 긍정평가는 8.2%p 감소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거나 속도조절필요하다는 의견이 70%에 육박했습니다. 다만, 진보성향응답자비율과 잘했다 비율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⁶⁾ 다시말해 ‘최저임금’이란 정책용어가 이미 정치적 이념화되어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평가]



[올해 최저임금에 관한 인식]



6)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 보수·중도성향의 경우 잘못했다가 각각 53.9%, 52.9%로 높은 반면, 진보성향응답자(39.8%)는 잘했다가 49.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최저임금과 관련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50.9%)이 긍정 여론(27.4%)의 2배나 되었으며, 부정평가의 주된 요인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소비자인식도 조사해 보았는데, 전체의 67.9%는 폐기·수정·보완 의견인 반면, 지속 추진은 29.1%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성적표도 F점에 가까운 조사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⁷⁾

4. 탈원전과 에너지가격과 소비자경제

양준모 교수님의 발제문은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 불과 1년6개월만에 불필요한 1조 2821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피부와 와 닿을 20% 이상의 전기료급등은 시간문제이며, 더 큰 폭탄은 향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상승이 명약관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입지조건 최대장점은 저렴한 에너지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러한 장점을 고사시킬 뿐 아니라 전기료 폭등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원전산업 국제경쟁력 약화, 미

7) 자세한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 사이트 참조. <http://www.ydi.or.kr/cafebbs/view.html?gid=main&bid=summury&pid=36700&cate=research>

세면지 확대, 일자리감소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전관련 여론을 보면,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8.6~7)⁸⁾, 응답자의 71.6%가 원전에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26.0%에 불과했습니다. 원전의 축소·확대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원전확대(37.7%), 현수준 유지(31.6%), 원전 축소(28.9%)로 나왔습니다. 축소의견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완전한 ‘탈원전’ 의견은 7.9%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학회에서 제2차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여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⁹⁾

이와 같이 비판적 여론이 비등하자,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는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정책”이라고 좌파이념론자들의 주된 특징인 말바꾸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용어를 갖다 붙이든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건설 백지화, 기존 원전 폐쇄’는 원전 산업을 고사시키는 탈원전임이 분명합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해외수출을 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 모순입니다. “원전같이 나쁜 상품”을 나는 소비하기 싫으니 탈원전하고, 해외로 수출하자! 선전하면 누가 우리 원전을 사주겠습니까? 원전수출국 중 탈원전 선언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미 수출에 성공했던 UAE 바카라 원전도 벌써부터 독점운영권에 파열음이 생기고 있으며, 다른 예정된 거래국에서도 수주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롤모델로 주창했던 대만도 최근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탈원전 정책 폐지했습니다. 지난해 8월 중 폭염 속 정전사태가 빈발하면서 전력수급 불안 문제가 그 주된 배경입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전면적 백지화를 통해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전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대만과 같이, 하루빨리 국민투표에라도 붙여서 망국의 지름길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8)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1천명 대상 조사.

9) 제2차 여론조사(11.8~9일), 원자력 전기생산비중 유지, 확대 67.9%, 축소 28.5%.

포기시켜야 합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최저임금과 탈원전 문제에 대해 발제 원고를 중심으로 의견을 피력해보았습니다.

시장경제의 주연(lead role)인 소비자를 괴롭히는 현 정부의 정책과오가 어디 이뿐이었습니까? 공공부문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세금 퍼붓기와 부자증세, 반기업친노동정책, 참여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부동산정책과 굶어 부스럼 만든 한미FTA재협상, 행동은 없고 말만 앞세우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언론장악과 선동·선전 등 수많은 잘못된 좌파이념성 정책추진에 따른 부담은 국가와 국민, 소비자에게로 귀결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인 탈원전과 최저임금 문제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얼마나 요의주도하게 선전이 되었는지, 제가 조사·분석해 본 바로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탈원전’이란 정책용어는 이미 정치적 이념화되어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어도, 이른바 ‘진보’성향의 국민들은 다른 정책이슈들과는 달리 소주성, 최저임금, 탈원전에 대해서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특히 탈원전 문제는 국민들의 정치적 이념성향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이들을 설득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로 인해 소비자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게 되는지 알려지는 일말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칩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 토론문

소비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최저임금 부작용 돌려막기에 희생되는 소비자

현 정부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영업을 포기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물가는 줄 줄이 인상되고, 소비자와 매일 마주하는 식당과 야채상점의 가격도 뛰어올랐다. 어느 중소가게 벽면에는 이런 문구가 붙여져 있다. ‘귀한 손님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기에 좋은 재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여파를 실감한 중소상인들의 고충을 말해주는 듯 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런 직격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도 낳고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심각한 폐해를 감추기 위해 정부가 돌려막기식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은 카드사들과 편의점 창업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불뚱을 낳고, 또 그로인한 부작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듯하다. 정책을 추진할 때는 더군다나 시장질서를 거스르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 다수의 피해자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 다수의 피해자가 소비자인 경우도 많다.

정부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구간별 수수료율을 인하해, 가맹점들로부터 모두 1조 4천억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 그런데 가맹점들이 절약받은 금액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만큼 민간 카드사가 덜 받게 되는 돈이다. 정부는 카드사의 지난해 마케팅 비용의 과다성을 지적하며, 각 카드의 부가서비스 현황을 조사해 어느 정도를 ‘과도한 부가서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민간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과도한지를 평가하는 것도 넉넉스런 일뿐더러, 기업의 마케팅 전략은 시장에서의 경쟁수단인데 경쟁을 제한한다는 발상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中 카드사 마케팅〉¹⁾

추진 과제	필요조치	일정
1.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합리화	세부 적용기준 마련	~'19.1월
	감독규정 개정	~'19.上
2.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프로모션 제한	유권해석	~'19.1월말
3. 대형법인회원 등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시행령 개정	~'19.上
4. 카드 수익성 분석기준 개선	약관심사기준 변경	~'18.12월말
5. 법인카드 연회비 면제 제한	행정지도	~'18.12월말
	표준약관 제정	~'19.上
6.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간소화	상품 운영안 마련	~'19.1월

게다가 정부가 칼을 들이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는 바로 카드소비자가 받는 혜택이다. 여름 물놀이시설 등의 문화이벤트나 쇼핑물연계 이벤트, 항공 마일리지 적립, 주유할인, 온라인마켓할인 등이다. 정부는 카드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소비자가 카드 이용으로 누리는 혜택이 연회비의 7배 이상이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 동안 카드사마다 다른 혜택을 비교해가며 가장 유리한 카드를 써 온 소비자의 선택이 과연 과도한 이익을 얻고자 한 이기적인 행동이었을까. 카드연회비 인상은물론 부가서비스도 대폭 감소도 불가피할 듯하다. 어쨌든 카드혜택을 즐길 기회를 앗아간 것이 어느 논점에서 출발한지는 소비자가 기억해야 한다.

1)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2018.11.26

한편, 몇 달전 편의점의 신규 출점시 거리 제한을 두는 논의가 뜨거운 논란이 되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편의점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가 갈등을 잠재울 수단 중 하나로 편의점 출점 거리제한을 들고 나온 것이다. 결국 지난해말 편의점업계가 자율규약을 맺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해, 향후 편의점을 신규 출점하려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제한’을 기준으로 기존 편의점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

〈 편의점 거리제한 일지 〉

7월.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도 최저임금 10.9%인상, 8350원으로 결정
 7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등 대정부 투쟁 예고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단 요구
 7월. 한국편의점산업협회, '80m내 편의점 출점 제한 자율규약안'
 공정위에 유권해석·심사요청했으나 반려
 8/22. 정부, '편의점 과당출점경쟁 자율축소 유도' 발표
 8/29. 서울시,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을 50m에서 100m로 강화 방안 발표
 12/3. 당정,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협의회' 열어 담배소매인 거리 같도록 논의
 12/4. 공정위, 6개 편의점 가맹본부의 자율 규약 승인
 신규 편의점 출점거리 기준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로 간주

하지만 1994년 편의점 업계가 ‘근접출점 자율규약’을 제정하자 2000년에 공정위는 이를 공동행위금지 위반이라며 폐기한 바 있다. 그 전례 때문에 공정위는 7월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제출한 ‘80m내 출점 제한’ 자율규약을 반려하였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번에 공정위는 담배소매인 거리제한²⁾ 준용이라는 간접적으로 거리제한을 두도록 한 자율규약에 대해서는 승인하였다. 전례와의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인 거리수치가 적히지는 않았다는 것일뿐이다. 공정위의 일관성이 상실된 판단이다.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은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담배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를 편의점 출점 거리의 기준으로 삼은 건 목적과 그에 따른 기준을 부당하게 결부시킨 행위이다. 또한

2)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편의점 출점거리와 관련해 8월말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을 50m에서 100m로 강화하는 방안 발표했고, 12월말에는 각 자치구에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편의점을 둘러싼 유동인구나 상권의 특성이 다른데 수요예측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출점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개입이며, 현재 과다출점으로 꼽히는 커피전문점이나 치킨집, 부동산중개소 등 다른 업계에 출점 제한의 잘못된 선례가 될까 우려된다.

신규 출점이 거의 불가능하면 권리금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회수하기 위한 과정은 최종적으로 편의점 소비자의 서비스 문제와 연결된다. 편의점들은 과거 정가제의 틀을 깨고 묶음·할인 행사를 진행을 비롯해, 간단하게 한끼 해결 가능한 음식이나 가정상비약 판매, 택배 업무 등 생활의 소소한 불편을 해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진화중이다. 소비자를 유인하는 서비스들이다. 실제 편의점의 이런 노력과 일인 가구 증가로 편의점 매출액은 몇 년 사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³⁾ 이번의 시장 진입장벽이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의 생활 편의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제기될 것이다. 수많은 소비자의 발길이 어디로 닿는지를 과연 정부가 미리 재단할 수 있을까. 편의점 거리제한이 정부정책의 폐해에 화가 난 편의점주 달래기였음을 상기하면 소비자는 음의 자격조차도 되지 않는 듯하다.

도서정가제에 희생된 소비자

2014년 11월말 알라딘, 예스24 등 온라인 서점 서버가 다운된 일을 기억하는가. 반값으로 살 수 있는 책을 며칠 후면 기껏해야 10% 할인밖에 못 받는, 도서소비자의 본능적인 심리가 구매폭주로 나타났다.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개정안, 일명 도서정가제법은 도서정가판매 대상을 신구로 전면 확대해 거의 모든 도서의 가격을 10%이상(마일리지 등 포함 15%)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특히 발행 18개월이 지난 도서를 더 이상 낮은 가격에 접할 수 없음을 책을 즐겨찾는 도서소비자의 행복을 크게 앗아가는 일이다. 그럼에도 목소리 높이는 소수를 위한 출판시장 건전한 유통이라는 명분이, 소리없는 다수의 소비자 후생보다 더 컸던 모양이다. 당시 이 개정안은 본회의 재석 215인 중 212인의 찬성을 받으며 통과됐다.

3) 통계청 유통업태별 매출액을 볼 때, 2010년 대비 편의점 매출액은 2.51배 증가했고 온라인은 2.6배, 대형마트는 1.39배, 백화점은 1.21배, 슈퍼는 1.14배 증가했다.

시장을 규제하고 강요하는 법·제도의 결과는 보통 그 선의의 취지대로만 흐르지 않는다. 도서정가제 시행 후 출판사 매출규모뿐 아니라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부수도 급격히 줄고 있다. 지역서점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한마디로 본전도 못 건진 법이다. 또한 이 법은 새 책의 판매시장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후, 온라인 중고도서 전문판매상들의 중고도서 가격도 꺾충 뛰게 만들었다. 물론 오프라인 알라딘 중고서점처럼 팔고사는 가격이 투명한 곳도 있다. 하지만 한철 지난 많은 중고도서들조차 도서정가제 가격도미노 영향을 받았고, 많은 국민들이 책에서 손을 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처럼 도서정가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되묻게 하는 상황인데도, 2014년 1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기로 한 도서정가제는 일몰을 유예받아 2020년 11월까지 연장되었다.

게다가 도서정가제를 더 강화시키는 출판·유통계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지난해 3월 출판사 단체들과 온·오프라인 서점, 전자책 유통사, 소비자 단체 등이 맺은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⁴⁾이 대표적이다. 협약은 발행 6개월 이내 도서를 중고도서로 판매·중개할 수 없게 했으며, 도서를 경품·사은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무엇보다 전자책 대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정시킨 것이 협약의 가장 핵심인데, 그 동안 출판·유통계는 전자책의 대여기간이 10년 이상 장기로 서비스되는 점을 두고 도서정가제의 ‘편법 할인’이라 비판해왔다.

〈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 中 도서정가제 〉

항목	제재 내용
중고도서	대형서점뿐 아니라 중고도서 판매자는 발행 6개월 이내 도서를 중고도서로 판매·중개할 수 없음. 새 책의 상품정보 및 검색목록 페이지에 새책과 중고도서를 병행 표기할 수 없음. 온라인 중고서점에 새책을 의미하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
전자책	전자책 대여 서비스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함.
경제상 이익	출판사가 도서판매시 굿즈(에코백, 컵)를 제공할 경우 굿즈의 매입원가보다 낮추어 제공할 수 없음. 굿즈 매입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해당 서점에 제출해야 함. 도서를 경품 및 사은품으로 지급할 수 없음. 1+1 경품행사 등 불가함. 문화상품권, 콘텐츠할인권 등 현금 가능한 유가증권도 도서정가의 최대 15% 이내 금액만 제공할 수 있음. 출판사·서점이 통신사·카드사 등과 제휴할 경우, 통신사·카드사는 판매가의 15% 이내로 제공할 수 있음. 독자가 서점 회원가입시 서점이 제공하는 이벤트 상품권은 1000원으로 제한함.
협약 위반시	위반 도서 및 위반 출판사에 15일 이상 1년 이하의 판매 중단 등 제재를 가함.

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해 설립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산하에 “출판유통심의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율협약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히려 ‘이익집단의 편법’이고, 출판·유통 서비스 트렌드에 눈을 감은 ‘외눈박이 협약’이다. 출판·유통계가 도서정가제를 계속 고수한 것이 소비자 마음을 전자책 대여 서비스로 돌리게 했고, 구매 보다 훨씬 저렴한 대여 서비스 개념은 소비자의 다양한 관심사와 호기심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소유하는 경제 중심에서 공유하는 경제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구독경제’도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넷플릭스나 멜론, 전자책 처럼 일정 수준 구독료만 지불하면 VOD나 음악, 책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가 소비자들을 붙들었다. 안타깝게도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더 쉽게 더 빨리 낳는 그 습성을 생각하면, 전자책 대여 서비스의 기간 제한에 이어 가격까지 규제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출판·유통산업은 당분간 달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소비자 후생과는 점점 멀어진다.

도서정가제와 자율협약 모두 건전한 출판·유통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 취지를 따르다면 공정한 거래가 목적이지 경쟁 제한이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할인율을 규제하고, 중고도서 판매 기한을 정하고, 대여 서비스 기간을 제한하고, 소비자에 대한 사은품 지급을 차단하고, 회원가입 포인트 금액까지 지정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거래인지 되묻고 싶다. 소비자를 희생시키고 특정 집단을 돕는 거래일뿐이다. 따라서 자율규제를 악용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서정가제 선의의 취지를 심분 이해하더라도 발행 후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도서에 대해서는 유통업체가 자유롭게 할인율을 책정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한다는 대부분 국가도 발행 18개월 지난 도서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⁵⁾ 또한 현행법상 전자책 판매는 도서정가제의 범위에 포함되지만⁶⁾, 전자책의 대여는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아닌 만큼 그 가격, 서비스기간, 대여충수 등은 당연히 시장의 자유에 맡겨져야 한다. 2007년 전자책 태블릿 킨들 출시를 시작으로 세계 14곳에 진출한 아마존은 프라임회원에게 대여기간 제한 없이 100만종 이상 전자책을 무

5) * 발행 후 18개월 : 독일 · 포르투갈 · 스위스

* 발행 후 24개월 : 프랑스 · 오스트리아 · 스페인 · 그리스 · 덴마크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스웨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2013년 12월, 7쪽)

6)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전자책 판매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도서정가제 적용 등 전자책 대여관련 정책개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4월, 102쪽)

료로 제공⁷⁾하고 있는 점을 우리 출판·유통계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획일규제에 교육선택권을 박탈당한 수요자

공익이나 공공성을 앞세워 어떤 제도나 정부행위를 합리화시키는 사례가 만연하다. 이런 재화의 성격을 공공재라 붙이고 정부주도하에 통제하려 한다. 공공재의 허울은 교육에도 덧씌워져 있다. 공익의 가치를 지닌 사회인을 양성하기 때문에 교육은 공공재이고 교육의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공성을 지닌다는 것이 공공재이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아닐뿐더러, 교육의 목적이 국가에 필요한 인재만을 길러내기 위해서도 아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기능을 습득하고 여러 경험을 쌓는 것은 개인의 발전이 기본전제이다. 개개인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사회의 공공선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의 상관관계가 뒤바뀔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교육이 공공재라는 논리는 왜 나왔을까. 첫째는 교육에 정부 개입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이다. 교육 관료들이 규제권력을 움켜지기 위해,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부터 교육과정, 입시까지 모두 교육당국의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다. 교육을 공공재로 묶어야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까지 모두 통제하고 규제권력을 키울 수 있다. 둘째는 수요자 선택과 경쟁체제를 막으려는 특정 집단의 전략이다. 그들은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줄 세우지 말라하고 특목고가 귀족학교로 낙인찍지만, 실은 교사 자신들이 평가받지 않으려하고 경쟁구도를 피해 안주하겠다는 의도이다. 결국 교육을 공공재의 틀에 가두면서 평준화, 평등을 외치는 것은 교육 관료들의 규제권력 확대와 교사들의 無경쟁·無열정을 위함이다.

그들에겐 교육이 공공재임을 설득하려면 방법이 필요했다. 정부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공공재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 하에 무상보육, 아동수당, 무상급식, 대학 반값등록금을 등장시켰다. 또한 국공립학

7) 위의 보고서, 103쪽

교를 돋보이게 하려고 사립학교를 비리, 귀족, 안전성 결여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몰아갔고, 이를 점점 사학 통제의 명분으로 삼았다. 유아교육기관의 국공립화 추진,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사채용·교사징계 권한 박탈 시도, 자율형사립고 폐지 시도, 대학 공유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등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공공재 억지 씌우기로 인한 피해는 교육수요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대부분 공공재로 명명되는 순간부터 정부에 의한 가격통제가 발생하는데, 공급자는 통제된 가격 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므로 수요자 요구에 맞는 여건을 갖추기 힘들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대학등록금 통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교육을 획일화와 하향평준화에 길들여지도록 할 수밖에 없다. 교육의 다양성 상실과 경쟁력 저하는 교육수요자가 가장 먼저 체감한다. 수요자들은 개인의 창의성과 잠재력 발전을 만족시키는 민간 교육시장을 찾아 나서게 된다. 사학 옥죄기와 공립화 시도는 수요자의 교육선택권에 대한 갈증만 더 높일 뿐이다.

2010년에 서울을 시작으로 도입된 일반고 고교선택제는 완전한 선택제는 아니지만⁸⁾, 수요자의 교육선택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낸다. 사실 일반고 교육을 평준화시키길 희망한 일부 교육감들은 취임시작과 동시에 이 고교배정방식을 변경하려고 시도했다. 학교별 성적 상위권 학생이 일부 학교에 집중돼 일반고 간 학력 격차가 원인이라 한다. 하지만 교육수요자 입장에서는 같은 현상에 두고 다르게 해석된다. 일부 학교에 성적 우수자가 몰리는 건 그만큼 교육수요자의 선택이 제대로 작동하고 학교 선호도가 뚜렷해졌다는 자연스런 결과이다. 실제로 2012~2015학년도 서울시 후 기일반고 신입생 지원·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⁹⁾, 국공립보다 사립학교에 성적 우수자가 점점 많아지고, 3년 사이 학교별 성적 우수자 비율의 격차가 커졌다. 또한, 강남과 강남 인접 학군, 목동이 포함된 강서학군, 중계동이 포함된 북부학군으로 지원하는 타학교군 지원자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고교선택제 이후 자기 학군 안에서도 선

8) 서울의 경우, 1단계: 서울 전역에서 학생이 원하는 학교 2곳 지원, 학교가 추천으로 정원의 20% 배정
2단계: 거주지 학군에서 학생이 원하는 학교 2곳 지원, 학교가 추천으로 정원의 40% 배정
3단계: 인접 학군별로 묶은 공동학군(19개) 내에서 학교가 무작위 추천으로 40% 배정

9)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 후기일반고 신입생 지원·배정 현황' 보고서, 2015년.

호 학교를 선택해 배정받을 수 있고, 또 그런 학교에 성적 우수자가 몰려 학교 학력수준이 높아지니 굳이 강남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을 쫓아다닐 유인도 약해졌다.

이제는 학교선택제의 완성도를 높여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고교선택제에서의 1,2차 배정 비율을 높이고, 교과내용이 수준별로 이루어져 교과와 교사를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국영수 과목처럼 수업시수가 많은 경우, 한 학년에서 같은 과목이라도 배정된 반에 따라 가르치는 교사가 다르다. 그야말로 복불복 교육이다. 또한 같은 반에서도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학생부터 수업수준 그 이상을 배우길 원하는 학생까지 그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 고등학교의 교과수준과 교사를 선택하게 한다면, 수요자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좋아하는 교습스타일에 맞는 교육을 받는다. 학교 교육서비스에 만족한다면 자연스레 사교육을 찾는 학생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정부 개입 확대, 교육 규제, 다양성 상실, 교육경쟁력 저하, 교육재정 증대 등 이 모든 것이 교육을 공공재로 둔갑시키면서 나타난 문제들이다. 교육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길은 교육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 회복에서 시작된다.

전동욱 변호사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 토론문

토론문

전동욱 변호사

1. 들어가며

우리는 모두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을 잘 알고 있다. 양을 치는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동네의 어른들이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들고 왔다가 속았음을 알고 돌아간다. 소년이 이런 거짓말을 몇 번 반복하다가 어느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다지만 어른들은 더 이상 그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도우러 오지 않아 양치기 소년은 마을의 모든 양과 함께 늑대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양치기 소년과 현 정부의 차이점은 양치기 소년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나 현 정부는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임을 인식하지도 못함은 물론 그것이 이 나라를 구원하리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 정부가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는 외침을 반복하고 있다는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탈원전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각색판에 따라 결말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양치기 소년의 경우에는 거짓말의 대가로 양치기 소년은 늑대에게 잡아먹히기라도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어떠한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호도했던 선전·선동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경우를 가정해 보아도,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나고 국민들이 고통받을 뿐 현 정부의 실세들은 대대손손 호의호식할 것임은 대한민국의 근대사만 훑어보아도 자명하다. 목청 높여 거짓말을 하고도 응징받지 않은 양치기 소년을 단죄하는 역할은 마을사람들의 몫이고, 이는 현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거짓 선전·선동에 앞장서는 가짜 지식인들을 단죄하고, 눈과 귀를 닫아버린 국민들을 이끌어 최종적으로 현 거짓말쟁이 정부의 과오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인들의 역할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여 동시대 지식인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컨슈머워치’의 시대적 소명이다.

2. 탈원전과 에너지 비용의 상승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가 상징하는 것처럼 현 정부는 경제를 무슨 무한동력 같은 것으로 전제하는 듯하다. 이는 탈원전과 에너지 가격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원전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단점을 안고 있지만 저렴한 에너지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탈원전을 하게 되면 앞서 지적한 단점의 문제가 해결되지만 에너지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를 절묘하게 분리해서 이야기한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것과 당장 전기요금을 올리는 일은 없다는 것을 동일 한 시점에서 이야기한다. 그렇다. 그들은 탈원전의 결과 필연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는 문제를 살짝 제쳐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 혹은 그 연장선에 있는 다음 정부까지는 어떻게든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폭등을 막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물론 전가의 보도인 세금을 사용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부유층의 돈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해결한다는 식으로 홍보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적어도 그들이 집권하는 동안은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이런 식의 전개가 불편한 이유는 우리의 이성이 저들의 말이 단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임을 금방 인지하기 때문이다.

발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전력공급 수단이 가스발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산 결과 현 정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의 기간에만 1조 1712억원을 추가로 지불하였다. 그리고 이 비용은 한전이 흡수하였다. 반면 환경적 차원에서 과연 에너지 전환이 얼마나 기여했는가,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가스발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은 결국 비용만 더 들인 정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일반인의 상식으로 정리하면 탈원전을 위해서는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만 한다. 탈원전 비용의 계산식 중간에 재생에너지를 끼워 넣고, 돈으로는 환산되지도 않는 환경적 이득을 제한하고 하더라도 결국 비용이 상승한다는 결론을 뒤바꿀 수는 없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그리고 그 비용의 상승이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준비가 되었음을 ‘1조원’이라는 숫자로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의도 좋고 평등도 좋고 환경도 좋다. 좋은 사람인양 하면서 좋은 말을 좋다하는 것을 지적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그 좋은 말들이, 그 좋은 생각들이 결코 돈을 만들어 주지는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당장 그 계산서가 우리 혹은 우리 자식세대들에게 청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백날 자본주의의 냉혹함을 비난한들, 우리 앞에는 거지꼴로 마음만 행복하든가 아니면 울면서 그 비용을 지불하든가하는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을 따름이다. 그런 의미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소위 마음 따뜻한 이들에게 과연 그들이 그 비용을 낼 것인가 혹은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비책은 있는가를 꼭 물어볼 필요가 있다.

3. 최저임금과 가계영향

발제문에서 잘 정리한 것과 같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현실에서는 분수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는커녕 실업의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현 정부가 복잡한 수학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를 단순한 산수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제는 정부의 바람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

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이론이 과연 제정신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산술적으로는 가계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는 딱 그 가정의 가계부에서 그칠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차상위 층의 임금도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모든 계층의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연봉체계를 감안하면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전 국민의 소득이 외부로부터의 자본 등의 유입 없이 증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물가가 상승한다. 고급스러운 경제논리를 몰라도 “내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 오르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제생활을 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다음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은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다. 그들은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출이 100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비용을 제하고 20-40 정도를 수익으로 가져간다.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의 부담을 한전이 오롯이 받아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급등에 따른 부담은 자영업자들이 그들의 수익에서 해결하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그들이 한전과 다른 점은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고 본인이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수익감소를 줄여나가는 해법을 찾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실질 수입이 줄고, 실업자는 연일 사상 최대를 갱신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폐업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최저임금의 급등 탓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경제를 산수로 해결하려는 현 정부의 단순 사고방식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기치가 올라간 뒤, 최저임금이 두 차례 급상승한 다음 벌어진 일임을 감안하면 그 연관성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 아니 몰상식한 분석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정부의 실험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이념의 정부가 들어섰으니, 한 번쯤 해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누군가가 말했다. 그러나 그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정권을 내주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 반문했지만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다. 속된 말로 최저임금 관련 정책 입안자들의 손목이라

도 걸게 했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문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의 입안·실행자 본인들이어야 마땅하다.

4. 소비자 이슈 관련 현 정부의 정책

요즘 소비자들은 주말에 장을 보려고 하면 인터넷 검색을 먼저 한다. 집 근처의 대형마트가 문을 열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불편을 감수한 지도 벌써 7년¹⁾이 지났지만, 전통시장이 호황을 맞았다든가 경제 주체들간의 경제 민주화가 자리잡았다든가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엄밀히 말하면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 입증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 정도 규제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2019. 2. 18.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전주시갑)은 준대규모점포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7. 10. 17. 중소기업벤처부가 '이케아 등 가구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위 법률안 역시 현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연말 한밤중에 강남대로에서 택시를 잡아 본 경험이 있는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도대체 왜 아직까지도 카풀업 사업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가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버'나 '그랩'과 같이 세계적인 기업들도 한국에 정착하지 못했고, 최근에는 카카오카풀이 택시기사들과의 극심한 마찰을 빚은 끝에 서비스시행을 잠정 연기했다. 이에 맞춰 현재 국회에는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기도 하다. 지난 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카카오모빌리티와 4개 택시단체가 참여하였으나 정작 택시와 카풀이용자들은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1) 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자체들이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였다.

5. 결어

앞선 사례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념을 중시하는 현 정부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적 투쟁 갈등을 조정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자율경쟁을 통한 경제발전 및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는 신경쓰지 않는다. 그러나 차곡차곡 쌓인 소비자들의 불만이 정부의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에 소비자단체들의 분발 및 컨슈머워치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This image shows a single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or grey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leaving small margins at the top and bottom.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or typing.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